A Market Friendly Approach to the Construction of a Northeast Asian Economic Hub

Young-Rok Cheong*

Arrangements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under the WTO system, have unexpectedly dominated globalization. In fact, countries that have realized economic arrangements, such as the EU's monetary union, are further expanding their efforts to achieve political integrati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s now considered an exigency of national affairs. North East Asian countries are also affected by this global predicament, but the issue involves greater structural complexities in this region. The emergence of China has forced Japan and Korea to contemplate difficult structural adjustments. For example, while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stronger intra-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y pursuing these arrangements it simultaneously faces the dilemma of maintaining traditional partnerships, such as those with the USA and Japan. If Korea actively supports regional economic arrangements, this action would be perceived as a bias toward China, consequently damaging ties with the US. Thus, rather than depending on public initiatives to establish economic ties in North East Asia, China, Japan and Korea should rely on market friendly projects initiated by the private sector that endorse gradual integration through non-political activities and exchanges among the citizens of the respective countries. This paper first proposes the founding of a North East Asian United University Community composed of students, professors and campuses of the three countries in the initial stages. Secondly, it proposes the development of unique Asian commodities, a concept similar to that of 'Airbus.' Finally, it proposes utilization of retired Japanese, Korean and Chinese engineers and technicians to speed up the overall level of technology, which is critical to overcoming backwardness in this region.

I. 서 론

2003년 시작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동북아경제동맹”론을 주장하고 있다. 한 때 “동북아경제동맹국가” 개념을 주장한 바 있었으나 나중에 “동북아경제동맹”으로 재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움직임의 배경에는 더 이상 우리나라 혼자로만 독자적으로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나서, 앞으로 여하한 세계경쟁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냐는 진로를 모색한 결과 나온 하나의 정책방향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본 논문은 개략적인 형태로 산업자원부 등 정부의 정책참고자료로 제시되었던 필자의 생각을 좀 더 학술적으로 발 전시킨 형태이다. 따라서 이것은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입장의 정립을 주장하는 정책 방향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점이 특징이다.

‡ "동북아경제동맹국가"란 용어에 대해서 중국측이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우리측이 "동북아경제동맹"으로 축소했다는 설이 있다.

§ 국정과제 참조 Website
한국은 현재 IMF관리하의 경제위기를 겪지면서 전반적인 경제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우리는 21세기 전입이래 국가발전, 특히 개인소득 1달러를 넘어서고 난 후의 선진국 정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도 새로운 국가정책으로서의 비전세계가 요구되고 있기로 하였다.

그런데 “동북아경제동반성”은 새로운 유통임은 전혀 아니다. 이는 이미 1985년의 PLAZA 합의를 풀점으로 한 1980년대 중반 이후, 한 후 세계에서 거론되었던 주장6의 연장선상에 있다. 1980년대 중반이후 국내에서는 동북아경제동반성 구상에 대한 논의가 확대 및 언론의 중심으로 직극적으로 제기된 바 있었다. 특히 이는 1990년대 초의 노태우 대통령 재임 당시에 북방정책의 추진과 “동북아경제동반성”설립의 구상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되던 바 있다. WTO체제가 출범되고자 나서 요소를 또다시 세계가 남태평양의 와해 이후 한반원으로는 세계화로 오아가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어려우면 어려우더라도 다시 국가간의 맥락기에 대해서 논제에 따라라도 새로운 진로모색이 불가피한 진단이다. 대외의존도7가 70%를 넘어서는 우리로서는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다양한 고려 속에서 진로를 선택하야 하게 되었다. 일부 정책학자들은 이들이 19C말엽의 한-중-일의 관계가 무척 복잡하게 엿보아가고 있을 구한말 당시로 비교하는 경향도 있었다. 특히, 당시 일본정부 한국의 교외하다한 황춘시엔(황춘연)이 들 족조건책을 제재해 이하는 시도도 있는 실정이다. 물론 시대의 변화를 감안한다면 그 비유가 깊은 타당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현상에서의 몇 가지 의의를 도출하기는 충분한 것이었다.

이처럼 국가간 경제협력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일반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세계화의 전제, 지역주의의 경화, 세계적인 산업 구조조정영향, 중국의 부상에 따른 우리과 활로 개척으로 요인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동북아경제동반성 추진의 타당성을 고찰하되, 구체적 정부가 주도하기 이전에 이미 시장진화론적인 역내의 경제간반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전제에서 논리로 전개하고자 한다. 즉, 지역국가의 관계에서 과연 우리가 지닌 비교우위가 어디에 있으며, 이러한 평가하에 보다 현실적인 임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요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세계화 속의 지역주의 전면개방 등을 중심 상호가 나서 일자리창작 관련에서 한국의 비교우위를 평가해보고 역내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방향을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II. 지역주의 추세의 필연성

1. 배경

(1) 세계화의 전제

1945년 8월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난 후 무려 반세기를 지속하던 냉전제제가 1991년 구소련의 극적인 해체에 따라서 세계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제 세계는 보기에 따라서는 아시아가 영국의 중단과의 아편전쟁의 시발로 시작된 19C중립이후의 커다란 국제화의 흐름을 반복하고자 하는 듯 보이고 있다.

6 사실 그 당시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으로 연합의 폐왕기를 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일일본 해제한 국장”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다시 다소 평행한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논의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7 대외의존도는 다양한 지표가 있으나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비공업 수출과 수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8 청말의 외교관으로서 광동성 출신이다. 초대 주일공사 허구를 따라 일본에 가서 청자사 참관으로 활동했다. 조선의 수신사 김홍중과의 만남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도 조선학자”인 “청중국 학자(日本學者)”를 추천하였다.
9 대표적인 학자가 서울대학교 아카데미 교수로 그는 “신조선학회”를 주도하고 있다. 즉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을 끌어들여 러시아와 일본의 영향력을 차단하였던 시도로 이해한다. 따라서 현재는 미국과의 관계도 지속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소위 “별도의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선언의 복잡성을 주장하고 있다.
세계의 정치, 경제 질서 측면에서는 현재의 상황은 미국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정치적으
로 UN, 경제적으로 WTO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큰 질서를 만들고 있다. 물론 미국의 대표로는 UN
이나 WTO의 결의를 무시하는 독자적인 음직임이 간신히적으로 나오게 됨에 따라서 UN이나 WTO의 유효성에
일부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 때 서방과 공산진영으로 나뉘었던 두 무대가 하나로 통합된 것은 엉뚱한 변화를 몰고온 것
이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경제활동 무대가 단일화 된 것을 환영하며 이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가? 우선 우리나라는 경제론자들로는 서방진영에서만 정책적으로 경제투자를 했었는데 세계화가 진
전됨에 따라서 러시아, 중국, 동구권전국가들이 우리의 경쟁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만큼 시장도 커졌
지만 경쟁상대가 늘어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최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급격한 경제구조 조정을 세계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며 우리의
경제 발전이 빠른 전진의 발자국이었다고 다소 까이내리는 듯한 자주적인 평가를 내리기조차 하고 있다. 즉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란 것이 외부 내재적인 형의 축적에 의해서 전적으로 유효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서방, 침략판에 서져 넘어서 경제발전이 촉발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1960년대의 미국의
원조혁신, 그 이후의 미국시장의 확보(1960-현재), 월남시장의 전환(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 중동
시장의 활동(1970년대 중반~1980년대 중반)등이 가능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경제가 비교적 순조롭게 보호
박 속에서 성장하게 되었다는 논지이다. 물론 이것은 상당한 정도의 설득력이 갖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
러나 이러한 현상이 우리경제 발전의 모든 것을 대변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의 내부적인 노력이 너무 무시
되는 점을말할 수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서 새로운 적응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가 그 시대보다 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보실 수 있다. 또한 때로는 독자적인 노선을 찾아야 하는 새로운 부담을
당기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의 동향과 서방으로부터 봉급된 체제에서 상당히 못했던 중국, 러시아 등이
이제 우리의 경제적 경쟁자로 입체화 되어있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로는 Paul
Kennedy등 많은 역사학자들이 거론하는 베리에 "역사적 유산"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
는 경우 우리나라의 1960부정적 정책도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것으로 역사학자들에서 견해하고 있다.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북아 내외 국가간의 관계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대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2) 지역주의의 강화

동태로 세계는 역시 이웃과 반복하면서도 가장 긴밀하게 더불어 살게 되며, 그만큼 이웃나라와의 관계가
강조되는 지역주의가 흔한 측면도 있다. 국제경제학에서도 중력이론(gravity model)이 전통적으로 그
중요성을 얻게 된 것도 이러한 영유**에서 일 것이다. 실제로는 기역적으로 보수적인 존재인지라도 모른다.
그리고 인간은 일정성 새로운 인식하는 범위는 것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아무리 사고를 넓혀 가면라도 공간 개념은 아직은 국내에서, 인근국가로 또는 우리가 속한 대륙에 한정하게 되는 한
계가 있는 듯하다.

---
* 이와 관련 미국 내에서는 미국의 역할을 봉제국제에 비유하는 음직임을 보이고 있는 조작가. 
* 재미있는 것은 한국은 그래도 GDP에 의하면 그 경제규모가 1조 2천억 달러로 되어 현재도 그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GDP규모가 3,600조 달러정도로 우리나라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 Paul Kennedy(1989) 참고.
* 이는 뉴욕의 불가리아인을 사회과학에 응용한 것으로 사람, 정보, 물품의 이동이 인구의 크기, 두자리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화속에서 지역주의가 대두되는 모순의 한 측면일 수도 있다. EU가 큰 반세기의 갈등과 혼란 속에서 역내 협력을 강하게 달성하는가 하면, NAFTA도 미국의 주도에 의해서 그 경제적 지위를 키운다는 점이다. 역내 지역간 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EU는 통화통합단계를 뛰어넘어서 정치적인 통합으로까지 거의 전환되고 있다. NAFTA는 그 출발은 역내 관세율을 내리는 자유 무역지대의 개념이었으나, 이제는 요소(특히 인력중심)의 이동도 아주 적극적으 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세계적 산업구조 조정

세계경제는 현재 대단위의 산업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생산력 측면에서, 명목의 와해이후 급격한 IT 혁신에 의해서 수요에 비해 생산력이 획기적으로 증가되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즉, 생산사정 보호상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틀이란 최근의 중국의 발전전략에서 국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절대적인 극복”→“최저생산 생활의 달성”→“국가자유의 실현”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수조 소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생활의 보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1단계는 단순히 신흥산업 등에 그 1단계적 정책 목표가 맞추지 못한 것이고, 2단계는 보편화된 가진품목의 보급, 3단계는 가공생산의 향후 등으로 간단하게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은행의 “세계발전보고 (World Development Report)”가 집계하고 있듯이 전 세계인구의 1/4 이상이 이미 1단계를 극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만 아니라면 산업혁명이 추구하던 대량생산에 의한 대중 소비단계는 2000년이 지난 현재 상당한 정도 달성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세계시장이 포화된 상태이고, 신규시장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생산측면에서 해명해 보자면, 설비의 과양이라고 단적으로 말 할 수 있다. 이 과정 설비를 여하하게 처리해야 하느냐 한다면 국내시장에서 해외로 진출하여 투자에 나서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조달을 편가하는 방법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조정과정에서 결국 국가간에 대대적인 산업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러한 측면에서도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 FDI가 연간 1조 달러를 한 번 넘어서는지가, M&A가 선진국 사이나, 또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도이다. 왜 현재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4) 중국경제의 효호에 따른 우리나라 환로의 개발

이러한 몇 개의 세계 및 지역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바로 인근 국가인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 국내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라서 “중국위협론”과 “중국기회론”, 또는 “중국전대부강론”등이 교차하고 있다.

---

*5* 경제 통합론의 시조인 Bella Ballas는 경제통합의 단계를 자유무역지대, 관세등정, 공동시장, 통화등정, 정치등정 단계로 각각 나누고 있다.

*6* 20C 후반부 21C 초반의 각종 혁신은 기본적으로 남성경제의 외세에 기인된 측면이 강하다.

*7* 당사국영 선생은 이들 씽지로을 향후 지대로 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8* 사실 외국인 투자수입은 많은 본국을 불러 일으킨 바 있으며 제국주의 시대에서는 극도로 기피된 바이다. 이 후에는 상당기간 선진국의 전투로로 지배된 바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까지에는 해외투자가 보다 보편화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UNCTAD는 주파된 FDI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매년 통계치를 집계, 출판하고 있다.

*9* 이는 국내의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성행하는 것으로서 중국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측면과, 중국의 고도성장을 통해서 세계경제가 공통번산 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로 나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중국이 내재적인 힘에 의해서 자생적인 발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무관한 입담성이 있다는 견해도 보이고 있다.
A MARKET FRIENDLY APPROACH TO THE CONSTRUCTION OF A NORTHEAST ASIAN ECONOMIC MUB

171

압세에서의 "부동원", "산업공동화추천"이 대두 된 지 오래다. 필자는 최근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투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중국내의 투자는 연을 15%이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증시, 우리의 상장 점유력이 중국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대해 우리를 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중국내의 경제적 건설화를 추구하는 것을 포함한 동북아경제협력의 강화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니 가변 역사적으로 보아 중국과 어느정도 관계를 맺고가고자 하는 일정한 금지의 문제로 그리 간단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70%이상으로 세계 250여 국가 가운데서도 중국, 싱가포르와 함께 국도로 대외의존도가 높음에 저렇게 경제적 긴밀화기를 연합적으로 추구할 수는 없는 이로운 것이다. 즉 일방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만을 강화하는 경우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 원활화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중관계를 포함해서, 대일관계 등은 전체적으로 제정을 해 보필이 있어야 내외 경제협력과 차원에서 "동북아경제협력"을 추구할 개념은 충분히 있다. 다만, 과연 "동북아경제협력"의 비전이 무엇이며 어떤 것을 목표로 추구해야 하는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2. 기존 역내 경제협력 모델평가

WTO가 집계한 지역협력의 사례는 근 20여개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 범위에서 비교적 성공하고 있는 사례로서의 역내경제협력의 것으로는 몇 개 되지 않는 듯하다. 또한 우리의 인관관계 실패의 사례도 몇 개가 있다. 즉, 성공, 실패의 예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평가 할 수 없다.

아무래도 역내 경제협력의 성공모델은 유럽연합과 미국형을 거론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우리나라와 또는 아시아와 연관지에서 기존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1930년대에 시작한 "대동아공영권"형성 추적임과 1985년 이후 한 때, 추진한 바 있는 일본의 동남아에서의 "Yen Bloc"형성 추적임이 될 수 있다. 필자는 경제통합 추적임의 성공・실패 요인으로 정치・경제적요소를 거론한바 있다. 즉, 한 개의 역내 경제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내국가 중에서 주도국가가 있어야며, 그 역내협력강화의 성패는 주도국가의 정치력이다. 경제적으로 유권 역내의 경제규모가 자금시장 규모가 되거나 세계경제와 비교해서 일정규모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역내가 있어도 역내국가간 교류비중이 적어도 40%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었다. 또한 역외와의 교역 또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체여야한다. 이러한 패턴의에서 EU와 NAFTA는 특별 조지에서 그 성공이 거의 보장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EU는 독일과 프랑스의 지도력에 의해서 EU지역을 통합시킴으로써 역내 회원국간의 경제적 이야기가 상당한 정도 재고되었으며, 역내 경제규모로, 역내교역 비중으로 보아서 경제관계보다는 보완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NAFTA 또한 EU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전체조건이 만족되고 있었고, 즉 미국의 지도력 하에서 멕시코와 카나다간의 분업구조가 상당한 정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 성공 사례

① 유럽연합(EU)


이처럼 유럽형의 경제통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근원에는 역시 프랑스의 Jean Monet와 Schuman이라는 타협한 정치지도자가 있었다. 특히 요새가 간 국가 경제발전에 절대적 요소였던 전략 및 안보물 추진, 화분, 석탄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는 대승적인 정치 지도력이 발휘된 결론을 도달할 수 있었으며, 역내 국가간의 경제교류를 적극적으로 강화(전략화)하는 한편, Airbus의 소위 유럽형 산업협력이 구체적이 고도 상징적으로 성공시킨 사례가 그 성공의 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② 미국형(NAFTA)

NAFTA의 전신은 1989년의 미·캐나다 자유무역지역(Canada·US Free Trade Area)협정이었으며, 이것이 멕시코를 포함함으로써 1994년에 NAFTA가 정식으로 출발하였다. 이는 미국·캐나다·멕시코라는 경제적인 규모순위나 발전수준에 있어서 "미주형 가리기모형"의 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다. 즉 미국의 정치, 경제적인 중심에 절대적인 지도력 하에서 캐나다, 멕시코가 수직적인 경제통합·결합을 이룩하게 됨으로써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멕시코가 보조하는 전형적인 주중관계의 경제교류가 역내에서 활성화되는 또 하나의 성공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형의 성공이 함의된 크기가 엄청난 국가간의 경제통합(homogeneous integration)이라고 한다면 미국형은 국가간의 극차가 현저한 이질적인 국가간의 경제통합(heterogeneous integration)이라고 칭할 수 있다.

(2) 실패 사례

① 일본형

아시아에서도 역내 경제통합의 시도는 이미 있었다. 그런데 역내 국가간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역내 경제협력의 도출은 실패하게 됐다. 이는 일본의 경제적 성공이 내재적인 것이었다가보다는 외재적인 것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경제적인 도약은 우선 세계에 대한 인식을 압하 국가가 운데에서도 재일만지 하게 된 것이 있다. 즉 중국, 한국, 일본 가운데 중국은 1840년대의 아편전쟁의 때였다. 두가지 고정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 대해 삼각관계의 구체적, 현실적 관계로 압박받는 시기라서 정상적인 일본은 1852년 협력의 도래로 효과적인 충격을 받은 지식층에서 일본을 철저하게 개혁해야 세계 국가로 태어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신사유럽단을 통해 서구의 변화를 적극 수용한 결과, 아시아에서 선두 주자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최선은 아니었다.

이는 프랑스의 수상 Schuman에 의해서 유럽형강착반공통체로 구체화 되었다. 하생선교수는 수백년간의 유럽 국가간의 반목이 역사적으로 구성원들로 하여금 실리적으로 역내 통합의 염��이 있다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산업혁명의 발현으로 시장의 범위를 확대해야만 생존하게 되는다는 강박관념 하에서 1930년대 한때 "대동아공영권"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앞에서 거론한 "미국형"에 근접하게 될으므로 경제적 협력 상대국으로부터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된다.

한편, 20세기 말에 또 한 번 일부 경제협력을 추구하게 된다. 일본은 1985년을 전후해서도 plaza합의 후 소위 "연합의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ASEAN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구조 하는 "친아시아 공업개발계획"노선을 주창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또한 과거 유산의 미징산으로 실패하게 된다. 물론 ASEAN에서는 외교 경제권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일본의 ASEAN의 역내 경제전환 노력이 여의치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2) 한국형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에 나서게 된 것은, 사실은 역사가 아직 짧다. 1994년 한국과 중국 간에 '한·중 산업협력 협정'을 체결했던 것이 그것이다. 그 당시 논의되던 "동북아경제공동체구상"을 보다 실현 가능한 현실 수준으로 내려려면 우리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한·중간에 협력을 고려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동북아경제공동체구상"이 너무 탈서구적인 (미국적)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배경에서 나타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또한 몇 가지 연유에서 결과적으로 그 성과가 지지부진하게 되었다.

처제, 우리나라가 자본, 기술, 인력에서 뚜렷한 우위가 불비한 상태에서 협력협정의 성사에 대한 탄력있는 전시 효과만 겨냥한 문제점이 있었다. 산업협력의 분야를 보면 중형항공기, 전자전기장, HDTV, 그리고 자동차 등으로 그 당시만 해도 현산업군에 속하는 산업들인데, 병렬하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완전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이익에 달아가여 이 분야에서 중국과의 공동협력이 한국의 앞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확신 하에서 김영삼 대통령 당시의 주도사였던 황병태 박사의 지도력에 의해서 추진된 바 있었다.

둘째, 한국의 기술경쟁력 우위에 대한 과신이 있었다. 즉 우리의 평균적인 경쟁력은 중국의 평균적인 기술 수준에 비해 우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원천기술이나 기초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산업혁명의 협력이 이루어지자, 결국 우리기업들이 해외 제휴선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러한 사실을 간파하게 된 중국으로는 구하게 한국을 거치지 않아도 그들이 필요한 기술취득이 기술공신 국가들로부터 직접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점차 홍미를 잃게 되었다. 즉, 신진국의 수많은 다국적 업계들이 경쟁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상기 개발산업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었으며 중국은 자극발진에 최적인 방법만을 선정하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었다. 둘째 그 이후 CDMA사에 협력을 끝내려고든지 하는 만에는 부분적인 성공은 있었으나 이를 과소평가할 수 만한 없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기서 역내경제협력체 구상을 포기해야 하는가? 아직도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며,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결과가 필요하다. 특히 무역과 투자가 나아가 역내로 집중되는 자연발생적 시장의 필이 이미 작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우리의 입장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구체적 부정부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면 허하다고 시장의 힘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역내경제협력의 긴밀화는 불가피하게 진전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20) 그는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스파라면노수수 밖에서 "유학사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III. 역내 경제협력 강화 방향

1. 역내 경제협력 필요성의 일반적 논의

우리는 1995년 WTO협정 이래의 세계화 시대에서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연계도 극복해야 하면서 아시아의 경제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독자적인 단위 경제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역내뿐 아니라 역외에서의 발전에 대해서도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던 바처럼 이러한 작업은 10년이나 20년 이내에 국가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EU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한 세대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역내 경제협력은 정치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러한 반면에서 시장진화적인 방향으로 추구되어야만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1) 아시아적 현재의 극복

여사시대 이래의 전 세계 발전에서 소위 극복할 수 있는 최근 200년간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아시아적인 발전은 몇 가지 현재가 있었던 것 같다. 우선, 아시아적인 발전은 내재적인 힘의 축적도 중요하였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외국(또는 역내)으로부터 지식은 물론이고 부까지도 끌어다 쓰는 것이었다. 물론 근대화 이전의 국가까지 포함한다면 중국이 한 때 세계국가로서 세계경제 발전의 중심에 있던 적이 있었다. 그 당시의 중국은 세계주의의 시대로서 아시아가 생산과 소비의 중심에 있었으며 이는 현재의 현상과 서양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근대의 아시아는 예기치 못한, 즉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서방의 부상과, 18세기 부엽의 중상주의적인 흐름이 세계경제계를 휩쓴 이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는 쇠퇴의 길을 걷어가게 되었다.

또 하나는 아시아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역내시장보다는 역외시장에 주로 의존했던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한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Paradigm의 형성과 역내시장 확대가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즉 더 이상 중상주의적 행태를 지양하는 한편 역내시장 확대를 위한 구상국가들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개발적인 국가발전의 악기나 아니라 EU나 NAFTA에 보완되는 아시아 역내 경제 간의 대치로 더불어 둘다를 통합하면서 아시아가 미주대륙, 유럽대륙과 함께 지구의 중심이 되는 국제적인 측면으로서 경쟁하면서 협력하게 되는 적절 경쟁지역의 하나의 구성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시장의 확대

역내 국가의 핵심인 한ㆍ중ㆍ일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수출과 수입을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해보면 대외의존도의 경우, 한국이 72%, 중국이 43.9%, 일본이 17.9% 전후로 치우이고 있다. 즉 한국이나 중국은 대외 부문이 국내경제 경기에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중국은 아직도 완전히 자본주의 국가로 탈바꿈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대외의존도가 표면적으로는 높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실제로 대외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역내경제가 불안정하게 된다면 동아시아 역내지역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앞에서 거론한 대외의존도는 물론이고 교역에 있어서도 역내의존도를 상당히 해고시킬 필요가 있다. 당장 200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각 국의 역내의존도는 한국이 22.6%로 가장 높고, 다음이 중국으로 21.2%, 마지막이 일본으로 17.2%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어도 역내의존도를 두 배 이상은 올리야지 역내 경제통합의 선두주자가 NAFTA나 EU의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동아시아는 보다 안정된 지체발전의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역외의 불안정한 시장보다는 역내의 보다 안정화된 시장을 키우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중국의 고속성장 탄력 활용

한·중·일이 포함된 동아시아 시장은 연간 총 6조5,000억 달러 정도로 세계 전체 경제규모의 20%를 약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경제규모면에서는 일본 4조8,000억 달러, 중국 4조2,000억 달러, 한국 4,800억 달러 등으로 일본과 중국의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이나 중국의 경제발전이 우리의 상장이나 발전에 좋은 역할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여히 활용하느라 고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또 하나의 측면은 중국의 성장률이 과거 20여년간, 그리고 앞으로 상당기간 연 평균 7~9%를 기록했거나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측면이다. 즉 역내에서도 중국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중국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측면 이외에도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를 향후 중국의 고속 경제발전과 연동관계를 적극도 하나는 결여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만으로 우리나라도 역내경제에 더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국의 고속성장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국내 부동자금의 보다 원활한 활용이다. 역내에서 일본, 한국이 이미 실질계약자가 마이너스로 변한 만큼, 이를 어떻게 역내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느냐가 무척 중요하다. 일본이 미니스 이자율로 된지가 이미 오래고, 한국이나 중국도 이자율이 무척 낮은 편이다. 중국은 개발자금의 동원을 위해서 자이자율의 유지가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투자처도 없어진데다가 신규자금을 발굴할 여지도 부지개게 된 그런 현실에서 자이자율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로서 보아서는 상당한 부동자금을 역내에서, 가령 China Fund화해서 중국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4) 역내 산업구조조정의 최적화

또 하나가 우리나라 산업구조 조정의 새로운 모식과 연관된 것이다. 당장 우리나라의 구 산업지도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산업발전의 경로가 1)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수입 → 2) 설비수입에 의한 신규투자 단계 → 3) 신규제품 생산 후 해외수출 → 4) 외환가득 → 5) 재투자의 형태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산업구조는 세계화 및 중국경제의 급격한 부양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하에서는 허덕일기가 심지리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측면에서도 새로운 산업역량, 동력의 집중을 위한 신성장축을 발견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N A F T A의 출범초기인 1995년에는 미국의 대 NAFTA의존도가 수출 29.4%였으나 2001년에는 36.3%로 늘어났으며 수입은 26.8%에서 30.5%로 늘어났다.
2. 임지론적인 관점에서의 한국의 비교우위 평가

(1) 임지론과 중국 경제발달지역의 교합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중국의 경제권력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정도 '동북아경제중심'이 되려면 가장먼저 중국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갖는 임지적인 입장이 어디에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전통경제학에서는 임지론(location theory)에 대한 고려는 그리 많지 않다. 최근 한 세대 이상 주류경제학은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 국제 경제학 등을 중심으로 시장의 관점과 정부의 역할, 금융의 역할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임지아우론은 미시적차원에서 구체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19세기 초엽의 독일 경제학자인 콘 푸렌은 도시의 탄생을 임지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토지의 생산력이 제일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된다고 주장하며, 지대와 거래비용의 상충관계가 도시형성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즉 한 지역으로부터 동심원을 그리면서 거래비용이 지대가 근원에 도달될 떨을 때 동심원의 중심이 바로 도시가 되는 것이다.

동북아경제중심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임지아우론은 네덜란드의 니캄프로 그는 임지경쟁의 가장 중요 한 결정요소로 교통, 통신, 에너지, 용수, 환경, 교육, 의료, 도시, 체육과 여행, 사회기관, 문화, 그리고 자연 부존 등 사회간접자본의 영역을 중심으로 12개를 들고 있다. 니캄프의 이론은 동북아경제중심에 적용하게 된다면 중국, 한국, 일본에서 과연 어떤 12개 영역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지이에 이들인기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1)

동북아경제중심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상의 임지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상 대인 중국의 경제권력을 일범해 보기로 한다. 즉 중국의 경제발전 핵심지역을 니캄프의 이론에 따라 인구 밀집, 넓이, 소득, 교육, 외국인투자, 대학교육등을 추가해서 분석해 본다면 대체로 4개 지역이 동북아경제 중심의 후보지역을 추출할 수 있다. 즉 필자는 중국을 대체로 전국 31개 성급 행정구역을 기반단위로 해서 4개 경제발전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상하이 일대의 35만㎢로서 남북국을 합쳐 넓이보다 크며, 인구 또한 2억명에 육박한다. 경제규모 또한 RMB 2조 5천억(약 3,000억 달러상당)으로 전국의 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역 27.2%, 외국인 투자유지 누계의 28.3%, 고정자산투자 28.8%, 고등 교육기간 분포 17.1%, 고급학생학대 비중 19.6% 이상 등 중국전체로 보아도 핵심적인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로 중요한 지역이 홍콩이 포함된 광둥성 지역이다. 먼저 19만㎢에, 인구 8,450만명, 소득 RMB 2 조 5천억 순으로 전체 중국 가운데 경제규모 25.7%, 외국인 투자 74.8%, 총 투자 10.5%등의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경제규모와 외국인 투자등에서 홍콩이 광둥성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있거나 홍콩과 인근 광둥성의 선언이 현재 경제적으로 통합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CEPA가 발표된 바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수도권지역으로 21.81만㎢의 넓이에 9.08만명의 인구가 있다. 경제규모 또한 전국의 10%, 교역 14.8%, 외국인 투자 10.5%, 총 투자 14.2%, 고등교육기관 설치도 12.8%, 고급인력 배출 비중 11.7%등으로 또 하나의 해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받는 것이 충청과 쓰촨성이다. 이곳은 인 구1억 1,737만명으로 그 넓이가 무려 57만㎢가 된다.

---

34 마크 벤리스(1999)
35 니캄프(1984)
36 상하이를 중심으로 재정, 안전, 장부지역을 포함한다.
37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홍콩의 경제적 참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중국대륙이 홍콩에 대해서 경제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우대조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38 베이징, 하베이, 타이저 등이 포함된다.
경제규모는 전국의 6.4%인데 이는 아직 교역(10%), 외국인투자 유치(2%) 등에서 나타나 있는 것 처럼 대외교류가 부진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 잠재력은 광장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중국정부의 서부개발계획의 핵심지역이 일단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점진적으로 이 지역은 마마란, 베트남등과 인접해 있음으로 인해 이들과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동북아 경제공동화에 기대는 달아선 이 지역에 비해 중국에 비해 평가 우위를 지나야 한다는 향계를 극복해야 한다. 여기에도 일본의 도쿄, 오사카 지역까지를 포함하게 된다면 논리는 절반 복잡해지게 될 것이다.

(2) 우리의 비교우위 평가

일단,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근거로 해서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거점조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는 즉 이점은 아닌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앞에서 본대로 하나의 국가기전 보다는 적도 4개의 권역이 결합하는 연합국가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중국과의 비교에서 우리의 지역적인 이점이 현재가 아니라 다른 얘기가 된다. 그러나 다항적이고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발전의 수준이 그레도 중국에 비해 아직은 앞서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좀 더 오래 경험했다는 점 등에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역할을 넘나들때 지리적임을 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발전이 4개의 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영토가 광범하하여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황해지역과, 한반도, 일본을 포함할 경우 아시아 전체발전의 관점에서 “동북아경제권”이라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동북아경제협력_Maxim”의 개념도 이러한 관점에서 유용하게 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화남과 동남아를 둔 경제권역과, 화중지역의 경제권, 그리고 동북아경제권이 있게되며, 이들 이 서로 경쟁하면서 협력하여 발전하게 되는 경우, 공극적으로는 중국전체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이런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있으면 유리하며, 중국 또한 인근에 우리와 같은 경제발전지역이 있는 것이 대등적으로는 유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이점이 있겠다.

또한 역내에서 우리의 강점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다. 즉 그 만큼 입장을 정확히 세우고 가정하고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반화할 수 있는 합의를 쉽게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앞마와 평등한 지도자간이 식견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의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평범한 중국이나, 나름대로의 선진화를 달성한 아주 보수적인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동성(mobility)을,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만이 풍화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발전의 후방주자로서 최근 35~40년만에 1인당 소득 83달러의 극빈 후진국으로부터 개인소득 1만달러의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경험을 하지 못하면 영원히 인식하지 못하고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는 1세대 낳았던 그 찬은기간에 다른 선진국들이 100년 이 상에 걸쳐 이룩한 업적을 달성한 것이다. 따라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현존 에너지에서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 향후 근본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정점이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한국이 때로는 모방해야 할 대상으로서, 때로는 실패를 극소화(최소화)하는 대상으로서 각각 중요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북한의 1,700만 인구에다가 600만에 달하는 전세계 각지에 분포해 있는 교포들 등이 있다.
우리민족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세계일강에 많은 교포들이 진출해서, 성공에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과의 연계관계를 잘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다음으로의 큰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V. 향후 역내 경제협력간밀화 구상

이상 우리는 역내 협력구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내, 역외에서 여하한 입장도 취할 수 있겠는데, 일부에서는 미국까지 포함된 APEC의 구도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 또한 일부에서는 ASEAN+3(중국, 일본, 한국)간 협력의 강화 구상,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동북아 3간 공동체 형성구상, 박사포럼 구상 등을 다양하게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보기에 그 주장에 나름대로의 일정일단이 있다고 판단한다. 문제는 우리의 인식(Paradigm)을 여하히 바꿀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필자가 보기에 큰 역사의 흐름에서 보아 30-50년 뒤에 시장의 합의의만 자연발생적인 “동북아경제 공동체”로 까지 전진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시 명시적으로 “동북아경제 중심”을 “동북아경제 공동체구상”의 변형으로 주장하고 나선다는 것은 소립대실할 소지가 크다. 즉 역사의기간이 큰 만큼 아직은 향자적인 구상으로 비쳐질 “동북아경제중심”론은 최소화 하면서 기존에 논의되는 둘 민감한 사항에 집중해야할 것으로 판단한다. 즉 앞에서도 제기했던바, 동북아의 경제나라도는 단기적으로는 모든경제협력에 근본적으로 공극적으로는(장기적으로)시장의 형으로,에서 동북아경제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성장될 수 밖에 없다는 긴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의 잠재적인 결론은 단기적으로 FTA를 포함한 여러 공동체에 다각적으로 참여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내부의 힘을 카우스 “자강”의 노력에 더 큰 힘을 쏟아야 할 때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있어 세계 250여개 국가 가운데서는 그래도 1위로서 억정한 규모로 커운 것이 사실이다. 즉 한 방향이 선정 된다면 성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장기적으로는 역사 한국의 새로운 신건은 고무한 단일민족개념이나 쇼바니즘적인 인식에서 크게 탈피해서 세계 국가로 가꾸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역사상 거의 초유의 시도일지 모른다. 일전 여러분에 과제로 보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예기한 장점만 대화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며, 이 과제는 결국 교육의 개혁(Content의 변화)에서 몰고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교육이 필 필요하느냐는 주장도 피조도 하겠지만 Paradigm의 Shift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육의 개혁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1980년대 경제교육이 한 때 강조된 것은 순수할까. 다시 말해서 아시아발전의 단초는 서구 문명의 조기수입, 신사유럽일의 파견, 국내교육 제도의 개혁을 통한 신규 Paradigm의 형성, 그리고 개발 전략의 추구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최근에 재림이 되고 있는 유결준의 “법령론”등도 과거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주어진 여건에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어렵게 헌신했던 것을 반영해 준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강국”개념이나 필자의 “알카국가론” 등등도 연관성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 자료 1 \] 외교통상부 집계에 따르면 제외도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 216만, 중국 214만, 일본 64만, 구소련지역 56만, 캐나다 17만, 브리질 9만명 등 총 677만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 자료 2 \] 총고(2003) 참조하기 바람.
A MARKET FRIENDLY APPROACH TO THE CONSTRUCTION
OF A NORTHEAST ASIAN ECONOMIC MUB

따라서 역내 통합의 장기적인 성사를 위해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순서가 아닌 문화 → 사회 → 경제 → 정치의 역순으로 준비하고 접근해야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장기적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성”에 실패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식으로, 어떠한 단계를 밟아서, 여하한 단계를 밟아서, 여하히 실패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필자의 논지를 좀 더 상술하기로 한다.

1. 형식

기존 역내 협력의 형식은 대체로 Bella Ballasa가 제기한 바처럼 상품교역의 원활화 → 투자 등 요소 이동의 원활화 → 안정책의 협업화 → 금융협력단계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공동체의 형성 단계로 진전되는 것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EU가 이미 최종단계로 이행하고 있으며 NAFTA가 그 전 단계로까지 진전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셋째, 지역주의의 반영이다. EU와 NAFTA가 이미 장기간 가 있는 만큼 우리도 아시아 내에서 극적적으로 역내 경제협력체를 형성해서 세계시장을 안정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진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몇 가지 요인이 향후 역내 공동체 형성은 형식이나 실행방안이 기존의 틀과는 다소 다르게 나와야 한다고 판단한다.

2. 단계별 접근

우선, 고려될 수 있는 것이 단계별 접근법이다. 즉 우리로서는 “동북아공동체구상”이 빠르고 약 20여 년은 소요될 것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1~5년 이내의 단기, 6~10년간의 중기, 그리고 10년 이상의 장기기간을 설정, 이를 각각 여하한 실패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패하고 논의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한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단계별 접근방법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향후 5년 이내에는 한·중·일 3국간 투자와 무역이 결합된 형식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투자의 핵심에는 역시 한국이 대표적이다. 중국에는 2001년에 WTO에 가입하고 난 후 제82회의 “차이 나라 любого”의 이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관계적인 기업체들이 중국의 시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느정도도 물론하고 적출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부터 중국이나 세계계의 FDI예치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역 내에서도 투자, 무역과 관련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역내에서는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많은 업체들이 중국으로의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점계되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일본 업계의 변화 움직임이다.

* 가령 한·중·일 세국통합이 1992년의 경우 교역이 그 전에 비해 두려 45%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일본 업계는 중국과의 경쟁심리에 의해서 기술유출을 우려하여 중국투자에 인색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바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많은 일본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부품업체들과 공동으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현상은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한·중·일 3국간에는 자연적으로 역내 산업구조 조정이 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구내에서 정부간의 협상이나 정치 지도자간의 커다란 노력이 없더라도 시장의 환경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역내협력이 보다 구체화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단기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란 것이 최소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불가피한 중국 상품의 상위 품질 때문에 관점적으로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도 포함된 본격적인 산업협력의 단계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제2차대전 이전의 한·중·일 관계나, 중국중심의 동아시아 집단이 터져서 장기적으로 불가피하게 다가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구체적 실행방안

(1) 동북아연합공 대학원 건설

첫째, 동아시아적 상품의 새로운 공동제작이다.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가정 “동북아연합공대학원”을 설치해서 그 설립 단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에게 각각 분교를 설치해서 이 대학원에서는 3국의 학생, 교수, 업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여 동아시아 고유상품의 연구개발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제한과 동일 업체 및 국가간 협력보다는 신규 제품을 동일 업체 및 국가간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판독되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상하이, 부두지역, 한국의 영등포지역, 일본의 잇사이지역에 가정 “동북아연합공대학원-부두” ”동북아연합공대학원-연주도”, ”동북아연합공대학원-간사이”등지를 설립하고, 한·중·일 학생을 공동으로 뽑고, 공동으로 교육을 써서, 한·중·일로도 강의하며, 각 대학

(2) 동아시아역전문가 양성

둘째, 국내외와 있는 이공계 박사들 중심으로 중국이나 일본과 연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연간 100명씩 5년간 5백명에 대해서 2년간씩 중국이나 일본태평양 지역, 근무시킨 후, 역에 대한 자원을 지원해 주는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조선일보 보도(2003, 11, 1 조종식기자 보도)
(†) 구체내용 (사)한중경제포럼 보고서(2002) 참조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주장하는 배경에는 적어도 한·중 및·한·일 관계에서 인력의 불균형이 일어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기술, 산업, 등 전문가 레벨에서 한·중간의 대화체널을 정확히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동아시아 규격의 제정

셋째, 신규제품에 대해서는 동아시아적 규격(specification)을 적용하여 이를 보다 세계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제안한 "동북아 연합공대학본"의 개념에 따라서 동아시아적 규격의 제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즉, 가장 가능한 영역은 상징적으로는 역시 동양의학 분야로서 생명공학 관련 공동 연구를 통한 공동 규격화를 통해서 아시아 내에서의 산업유발 효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산업유발 효과까지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4) 협화간 교류강화

넷째, 협화 차원의 한·중·일 산업의 공동체 제도화이다. 이는 단기 및 중기의 양제협, 협회협 대화를 상시화 함으로써 서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주는 것이다. 물론 협회의 능력은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 검토할 수 있는 것이 경제협회, 자동차협회, 석유화학협회 등 산업의 전후반 효과가 큰 중합분야에서 3국의 협력이 각국의 산업자체 발전은 물론이고 역내 산업 발전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될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다.

(5) 기술전달자 활용

마지막으로 역내구조조정에 추진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산업발전의 매각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한 교류의 권장 및 기술기술자 활용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고령화 시대로 이전 되어서 심지어 "45세, 56도"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육체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유효한 인적 자원인 기술기술자들의 가중화로도 더 경제발전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중국에는 30만명의 우리나라 국민이,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20만명 정도의 조선족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 만큼 인적 교육과도 포함된 협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주하고 있다. 이들 인적교 류가 단순히 30업종에서 그치는 한계 및 교육을 뒤로 남아서 전문기술 영역으로 확대되다면 그 만큼 역내 산업협력이 더욱 확실질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역시 경제공동체 구상의 극극적인 목적은 개별 국가내의 요소 최적배분의 국가목표를 뒤에서 역내 요소 최적 배분 및 활용을 개발한다는 측면에 있다는 점을 감안,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1) 45세가 실질적으로 56세까지, 직업을 갖고 있다면 도둑이라는 뜻이다.

KITA(2002) Korea and the World-Key Indicators


